

# 차기정부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

## “ 책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

###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7년 4월 5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도종환, 김민기, 유은혜, 소병훈
- 주관 :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학습자료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 후원 :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 ■ 세부 일정

시간	순서	내용	비고
<b>1부 식전행사</b>			
14:00 ~ 14:05	개회	개회 및 국민의례	
14:05 ~ 14:30	축사·인사말	축사 및 인사말씀	
<b>2부 토론회 (좌장 : 장은수 출판평론가, 편집문화실험실 대표)</b>			
14:30 ~ 14:50	발제	발제 1 '독서력과 시민의 품격' - 장대익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14:50 ~ 15:10		발제 2 '출판문화진흥정책 이대로 좋은가' -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15:10 ~ 15:30		발제 3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독서사고 표현과 책의 미래' - 이민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5:30 ~ 16:00	지 정 토 론	토론 1 정우영 (시인, 신동엽학회장)	
		토론 2 안찬수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토론 3 김한청 (한국출판인회의 기획정책위원장, 도서출판 다른 대표)	
		토론 4 박효상 (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담당 상무이사, 사람in 대표)	
		토론 5 정성훈 (서울서점조합 대외협력위원장)	
		토론 6 박세중 (언론노조 출판노협 의장)	
16:00 ~ 16:10	질의응답	질의응답 및 폐회	



<b>인 사 말</b>	도종환 국회의원 .....	4
	김민기 국회의원 .....	6
	유은혜 국회의원 .....	8
	소병훈 국회의원 .....	10
<b>축 사</b>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	12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4
<b>좌 장</b>	장은수 출판평론가,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b>발제 1</b>	<b>‘독서력과 시민의 품격’</b>	
	장대익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	19
<b>발제 2</b>	<b>‘출판문화진흥정책 이대로 좋은가’</b>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	27
<b>발제 3</b>	<b>‘제4차 산업혁명시대 독서사고 표현과 책의 미래’</b>	
	이민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37
<b>토 론</b>	정우영 시인, 신동업학회장 .....	47
	안찬수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	50
	김한청 한국출판인회의 기획정책위원장, 도서출판 다른 대표 .....	53
	박효상 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담당 상무이사, 사람in 대표 .....	56
	정성훈 서울서점조합 대외협력위원장 .....	60
	박세중 언론노조 출판노협 의장 .....	63
<b>부 록</b>	문학·출판·서점·도서관·독서·교육 관련 단체의 제19대 대통령 후보 공약 제안	
	〈책 읽는 대통령, 책이 문화정책의 기본인 나라〉를 위한 성명서 .....	67

# 인사말

국회의원 **도종환**  
(충북 청주시흥덕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입니다.

차기정부의 출판산업진흥 정책 제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 〈책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같이 준비해주신 소병훈 의원님, 김민기 의원님, 유은혜 의원님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관계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몇 년간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했고 블랙리스트를 지원에서 배제하는데 활용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났듯 ‘문화’를 사인의 이익 도구로 전락시키며 문화농단을 했습니다.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내걸었지만, 결국 문화예술계는 피해였고, 문화행정시스템은 무력화됐으며, 문화의 격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출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작가와 출판사들이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출판문화 산업의 침체보다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망가진 것이 더 큰 상처이자 손실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치와 비전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9일 20개의 문학·출판 단체들은 〈책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는 성명서를 내면서 “책을 읽지 않는 사회는 창조적 문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책을 외면하는 사회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없다. 책을 읽는 시민의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엄중한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는 문학과 출판, 그리고 도서관이 선순환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자 시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책의 힘을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곧 출범할 차기 정부가 독서와 출판의 가치를 깊이 새기고, 움츠러든 출판문화산업을 제대로 지원하고 진흥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창작, 출판, 독서, 도서관의 자유 보장’을 포함 다양한 정책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향후 여러분의 제안이 어떻게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는지도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인사말

국회의원 김민기  
(경기 용인시을)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겨울을 보내고 다시 맞는 봄입니다.  
침체된 출판 산업 곳곳에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민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출판 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존경하는 도종환 의원님, 유은혜 의원님, 소병훈 의원님과 함께 열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애써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출판은 문화산업의 근간입니다. 독서, 교육, 학술, 연구 활동의 토대로 우리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은 매우 큼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 산업은 침체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중요성만큼 제대로 대접받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 정부는 출판 산업을 진흥하겠다고 5개년 계획만 세 번이나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변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분석해서, '23개 세부 과제들 중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4개에 불과했고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과제는 8개,

부분적으로나마 시행되고 있는 과제는 11개였다'는 연구보고서를 냈습니다. 과거 정부가 과연 출판 산업을 진흥시킬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올해 2월 문체부는 새로운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화점식 나열된 정책 목록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의지와 집행력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위기는 이어서 옵니다. 차기 정부는 출판계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위기에 빠진 독서 문화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흥계획을 세우고 집행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출판 산업의 실질적인 진흥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가 깊이 있게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장대익 교수님, 백원근 대표님, 이민호 교수님과 토론자 여러분의 좋은 말씀 잘 듣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인사말



국회의원 유은혜  
(경기 고양시병)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유은혜입니다.

‘책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0년의 대한민국은 사회 전 영역의 근본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와는 달리, 과거로 회귀한 ‘역주행’의 시절이었습니다. 민생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한 영역 앞으로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겨우내 촛불로 광장을 밝히며, 국가의 근본을 다시 세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준엄하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와 행정은 아직까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차근차근 사회 전 영역의 적폐를 청산하고 근본을 다시 쌓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문화영역에도 수많은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 중심, 대형 산업 중심, 소수의 독점자본 중심의 문화정책이 지난 10년간의 대표적인 적폐입니다. 이러한 문화정책 기조 하에서 문화의 근본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곧 들어설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방향과 중심을 ‘근본의 강화’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문화의



근본을 세우는 첫 번째 단추는 ‘출판’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책은 표현의 자유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와, 창의성으로 대표되는 문화강국의 뿌리입니다. 인류는 책을 자유롭게 출판하기 위한 수백 년간의 투쟁을 통해 비로소 표현의 자유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출판활동을 쟁취한 인류는, 책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사상을 주고받으며 더 높은 수준의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사회구성원들이 책을 가까이하고, 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며, 책으로 얻은 지혜를 공유할 때야만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문화국가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독자층을 보다 두텁게 하고, 다양한 종류의 양서를 출판하도록 하며, 도서 유통시스템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이는 새 정부의 문화정책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새 정부의 문화정책이 출판을 중심으로 재정립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출판이 우리 문화영역의 기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5일

국회의원 유은혜

# 인사말



국회의원 소 병 훈  
(경기 광주시갑)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장 국회의원 소병훈입니다.

먼저 출판산업의 진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뜻 깊은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도종환 의원님, 김민기 의원님, 유은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출판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UN 발표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인의 독서량은 192개국 중 166위로 성인 10명 중 3~4명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 국내 출판도매상업계 2위인 송인서적은 100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사태를 맞았고 중소 출판사 및 서점의 연쇄부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출판산업의 위기를 단순히 책을 읽지 않는 국민, 고질적 폐해를 방치한 출판업계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로 정부가 정부의 입맛에 맞는 출판과 서적만 지원해왔다는 비극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고은 시인, 한강 작가 등 우리나라의 귀한 자산인 문학인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편협하고 편중된 정부정책이 출판산업의 발전과 확장을 가로막는 주체 중 하나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출판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입니다.

학생들의 교과서와 대학생들의 전공교재,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전문서적 등 출판은 사회 모든 분야와 연계되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화는 프랑스의 심장이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책”이라는 오드레 아줄레 프랑스 문화 부장관의 말 역시 국가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 과정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출판의 가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혹자는 최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화두인 ‘거짓의 시대’ 혹은 ‘탈진실의 시대’는 사유하지 않는 사회의 필연적인 귀착점이라고 평하며 이에 맞설 무기로 지식과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정부 및 국회로 대표되는 정책담당자와 업계, 국민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출판 산업의 진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넘어 ‘지식과 사유의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시어 발제와 토론으로 함께 해주시는 전문가분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축사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입니다.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노력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김민기, 유은혜, 소병훈 의원님과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님, 한국출판인회의 강광실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신 장대익 교수님, 백원근 대표님, 이민호 교수님과 토론자분께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책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오늘 토론회의 제목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되기 위한 지도자와 시민의 자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보통사람의 상식적인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는 진리를 몸소 겪어보았습니다. 지도자가 보통사람의 상식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폭넓은 독서를 통해 세상과 원활하게 소통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광장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독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정부 출판 정책은 진흥이 아닌 해체정책에 가까웠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대표되는 각종 통제정책으로 출판 산업의 위축을 가져왔습니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출판 산업 진흥과 출판의 자유는 사라지고 꺾이기만 남았습니다. 공공의 정책과 예산이 소수의 사적 관심과 이익에 동원됐습니다.

올해 초 송인서적 부도로 출판계는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출판업계 전체 위기로 번지지 않

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수위를 접하던 송인서적의 부도사태를 보더라도 주먹구구식의 정부대책으로는 출판사업의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수 없습니다. 출판 진흥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할 때입니다. 적폐 청산 없이 출판의 진흥과 발전은 요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 출판 산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다양성과 자유를 보장하며 출판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문화산업의 기반인 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출판문화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파편적인 지원 사업이 아닌 산업 진흥을 위한 새 판을 짜야 합니다. 출판이 살아야 독서 생태계는 물론 진정한 문화 융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출판업계를 비롯한 학계 등 여러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우리 당이 반영해 나가야 하는 제안들이 많이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차기정부 출판 산업 진흥을 위해 다 함께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서왕 김대중 전 대통령님, 다독왕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이어 책 읽는 대통령, 책을 사랑하는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 축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상 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입니다.

지난 1월 국내 출판업계 최대 업체 중 하나인 송인서적이 총 600억 원대에 가까운 부도를 내면서, 출판계 전체에 커다란 파장이 일었습니다. 결국 법정관리 후 매각으로 상황이 정리되었지만, 이번 사태로 기반이 매우 취약한 국내 출판산업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스마트 기기 보급과 문화콘텐츠 소비 다양화에 따라 현재 국내 출판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중입니다. 2015년 기준 전체시장 규모는 4조 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습니다. 2012년과 비교해도 5.2%가 감소한 숫자입니다.

이렇듯 출판업계 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출판산업 진흥 관련 예산은 총 367억 원으로, 게임·영화·방송 등 타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액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더욱이 송인서적 부도 처리로 인해 관련 지원금 50억 원도 이미 소진된 상태입니다. 전체 콘텐츠산업 매출의 20%를 담당하는 출판산업의 위상을 생각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지원 환경입니다.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문자 발명 이래 출판은 인류 지식의 보고이자,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IT모바일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출판산업이 문화 콘텐츠에서 차지하는 가치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리포터’와 같은 소설은 영화, 게임, 뮤지컬, 테마파크 등 여타 콘텐츠로 그 영역을 넓히면서 총 308조원에 이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하는 문화 정책을 지양하고, 출판산업을 핵심적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간주해,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는 정책 기조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마련된 이 자리를 통해 국내 출판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해법들이 제시되길 기원합니다.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느라 애써주신 존경하는 도종환·유은혜·김민기·소병훈 의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뜻 깊은 자리를 찾아주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우리 곁으로 다가온 이 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호





차기정부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발제 1

# 독서력과 시민의 품격

장대익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 발제문 1

## “ 독서력과 시민의 품격 ”

장대익(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무엇을 읽어왔는지가 그 사람이다.”(마틴 발저)

인류가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분명한 것은 2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탄생하고 그 이후로 19만 2천년 동안이나 우리의 조상들은 문자 없이도 잘 생존해왔다는 사실이다. 대략 8천 년 전쯤에야 문자가 발명되었고, 수메르인들이 점토에 글을 새기고 전수하기 시작한 것은 6천 년 전쯤이었다. 이렇게 독서가 6천 년쯤에 시작된 인류의 지적 활동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뇌가 책을 읽게끔 진화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류의 문명이 본격적으로 진화하기 시작하면서 독서의 중요성은 점점 커졌다. 문명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후대에 전수해줄 지식과 기술의 총체가 점점 더 복잡해지자 구전으로는 불충분해졌기 때문이다(물론 문명의 진화를 독서가 촉진한 측면도 있다). 텍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전수하고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과 집단의 생존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 능력으로 진화했다. 이런 면에서는 문명 발흥 이후에 우리 인류는 독서를 하게끔 진화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진화에는 늘 비용이 든다. 독서는 뇌에 부담을 준다. 텍스트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전수 해주려면 뇌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독서가 인류의 행위 목록에 들어온 이후로 사라지지 않은 것은 그 비용보다 독서를 통해 얻는 이득이 더 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이득은 무엇일까? 흔히 이런 물음은 인문학적 질문이며, 대답 또한 인문학의 영역이라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보고자 한다. 독서를 해야 할 이유는 뇌과학, 심리학, 심지어 진화학의 관점에서도 묻고 대답 될 수 있다. 본 발표에서 나는 과학이 독서의 이유와 효과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독서력을 정의하고 그것이 시민의 품격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말하고자 한다.

## 1. 독서는 문명의 엔진으로 진화했다.

인간과 침팬지는 600만 년 전쯤에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사촌지간으로, 둘 간의 유전적

차이는 겨우 0.4%에 불과하다. 하지만 침팬지는 여전히 아프리카 숲에서 견과류를 돌로 내리쳐 깨먹는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반면, 우리의 조상들은 숲을 나와 초원을 달려 지구 끝까지 흩어져서 거대한 문명을 일으켰다. 육상 척추동물 가운데 이렇게 단기간에 넓은 범위로 퍼져 생태적으로 성공한 종은 호모 사피엔스 단 한 종뿐이다. 대체 무엇이 침팬지와 인간의 길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많은 연구자들이 그 비밀을 사회적 학습 능력에서 찾는다(Tomasello, 2014). 남으로부터 보고 배워 전수해줄 수 있는 능력을 사회적 학습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능력은 인류와 침팬지의 커다란 차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한 개인이 시행착오를 통해 얻는 성취를 문명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문명의 집단적 작업이다. 즉, 누군가가 새로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그것을 모방하거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전수해주고, 결국에는 지식과 기술의 체계에 그것이 하나 더 얹어지는 방식으로 문명은 축적되어 왔다(장대익, 2017). 이때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지 않았다면, 즉, 모든 것이 다 '구전'으로만 전수되는 경우였다면, 문명의 탄생, 축적, 그리고 변형의 단계들에서 임계점을 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문명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인간이 사회적 학습자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것을 공유하고 전수하고, 기존의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더해갈 수 있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자로 된 텍스트(넓은 의미의 '책')는 말로 된 텍스트에 비해 지식 전수의 '복제 충실도(copying fidelity)'를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문명의 축적과 확산을 가능하게 한 문화적 혁신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학습의 대표적 사례인 독서는 문명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문명은 심지어 붕괴될 수도 있다. 그린란드 북서쪽의 이누이트 족의 사례는, 전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문명이 붕괴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들에게 카약, 작살, 화살 등을 만드는 기술과 노하우는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식인데, 그들의 풍습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사용하던 도구들을 모두 함께 묻는 풍습이 있었다. 그런데 1820년대에 전염병이 돌면서 제작의 노하우를 알고 있는 노인들이 갑자기 다 사망하게 되었고, 그들의 풍습에 따라 그 노인들이 사용하던 물건들도 전부 땅에 묻혔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 동안 그런 도구들을 만드는 법을 알지 못해서 그 종족의 운명은 거의 끝나갔다. 그러다가 다른 섬에서 온 부족에 의해서 기술이 복원되고 회생을 하게 되었다. 글로 남기고 전수하고 배우지 않으면 문명은 붕괴될 수 있다. 책이 사라지거나 더 이상 나오지 않거나, 그것을 읽고 전수해주지 않는다면, 문명의 엔진은 말 그대로 멈춘다.

## 2. 독서는 느린 생각의 원천이다.

사회적 학습 능력이 문명을 만들었고, 독서가 그 문명의 엔진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 아닌가? 인터넷과 디지털 영상매체가 범람하는 시대에 아날로그 텍스트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지 않은가? 독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학습을 해도 되고, 또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왜 굳이 책이어야 하는가 말이다. 디지털 시대의 독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묻는 이 질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요즘은 정말로 디지털 영상 텍스트들이 넘쳐 난다. TED를 통해서 좋은 강연들을 마음껏 볼 수 있고, Youtube를 통해서도 수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다. Coursera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도 대학교 수준의 강의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정보들을 빠르게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할까?

정보가 많다 못해 범람하고 모든 게 빠르게 흘러가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놓치는 게 너무 많다. 무언가를 찾아보려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있다. 어제의 최신 정보가 오늘의 구식 정보가 되고, 이 속도를 따라가기엔 개인에겐 너무 벅차다. 결국 우리는 그 거대한 디지털 텍스트 앞에서 주저앉아버리거나, 아니면 그저 따라서 흘러간다. 지식을 얻는 것도 그저 일방향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만 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무언가에 몰입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몰입을 위해 필요한 것은 생각하는 힘, 즉 생각하는 근력인데 그저 쏟아지는 정보의 폭포를 맞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근력을 기를 수 없다(니콜라스 카, 2011).

흔히들 ‘빠른 정보 습득(fast learning)’이 최선의 공부법인 것처럼 간주되지만,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생각들은 ‘느린 생각(slow thinking)’으로부터 나온다. 없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다르게 보고, 옛것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은 느린 과정이다. 인간의 뇌는 깊이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새롭게 보는 작업을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뇌의 전전두 피질에서 일어나는 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독서가 이 느린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라는 사실이다.

혹자는 영화를 보거나 티비를 볼 때도 몰입을 하는데, 왜 굳이 어렵고 힘들게 책을 봐야 하는가,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몰입을 한다고 해서 다 같은 몰입이 아니라는 점이다. 영화나 티비를 보고 몰입할 때 우리의 뇌는

주로 시각피질만을 활용한다. 하지만 책을 읽으며 몰입할 때는 뇌의 전체가 활성화되고 활용된다. 뇌의 전체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기존에 연결하지 않았던 지식들을 연결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들이라 할 수 있다. 정보 범람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역량 중 하나가 창의적 연결 능력이라고 한다면, 독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독서는 이 시대에 필요한 ‘능동적 시민’을 위한 핵심 역량이다.

### 3. 독서는 공감력을 증진시킨다.

위에서는 독서가 인지적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했다. 독서가 우리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소개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소설책을 주고, 9일에 걸쳐서 매일 책의 1/9씩을 읽게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마다 그들의 뇌를 관찰했다. 그 결과 책을 읽는 9일 동안 좌각회/연상회라고 부르는 부분과 내측 전전두 피질 간의 연결이 강해졌다. 좌각회/연상회는 글의 이해 및 공감과 관련된 뇌의 영역이고 내측 전전두 피질은 공감, 연민과 같은 사회적 정서 반응 및 기억력을 관장하는 부위이다. 이 부위의 연결이 강해졌다는 것은, 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생각, 감정, 지식 등을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책을 다 읽고 난 후 5일 동안에도, 한동안 체성감각피질과 후두엽에서의 연결 강도가 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마치 주인공과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활동 상황이 실제 뇌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런 연결이 독서가 끝난 후에도 지속된다는 것은 결국 독서가 뇌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Berns et al., 2013).

조금 더 재미있는 실험도 있다. 참가자들에게 책을 읽게 한 후에 실험을 마치면서 연구자가 실수인 척 책상에 올려져 있던 볼펜통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바닥에 떨어진 펜을 줍는 것을 얼마나 도와주는지 보았더니, 글을 읽는 동안 등장인물에 정서적으로 공감을 더 잘 한 사람일수록 더 잘 도와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책을 읽으며 독자가 하는 공감 경험이 실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이다(Johnson, 2012).

영국의 대문호인 마틴 발저가 “무슨 책을 읽어왔는지가 그 사람이다”라고 했다. 위의 연구 사례들은 이 명제를 실험적으로 입증한 연구인 셈이다. 최근의 뇌과학자들은 뇌가 경험과 학습에 따라 많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 이를 뇌의 ‘가소성(plasticity)’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뇌는 해부학적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뇌를 쓰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변화한다. 독서는 인지적, 정서적 뇌를 모두 변화시키는 가

소성의 원천이다.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건강한 뇌를 가질 수 있다.

공감력이 높은 국민들이 많은 국가일수록 국가의 품격은 올라간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모든 국가적 재난들은 그 인과적 사슬의 어딘가에 ‘공감 제로’에 가까운 사람들이 파리를 틀고 앉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의 공감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아니겠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독서는 유력한 방법이다.

#### 4. 독서력이 시민의 품격이다.

독서가 좋은 과학적 이유들은 위에서 언급된 인지/정서의 몇몇 측면 말고도 더 많다.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독서는 독자를 더 똑똑하게 만든다.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 어휘를 확장시킨다.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분석력을 높인다.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한마디로 하면 독서는 우리를 더 사려 깊고 배려심이 많은 품격 있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다(Kidd & Castano, 2013).

이에 나는 앞서 제시한, 독서에 대한 몇 가지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독서력(readability)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독서력’이란 다양한 분야 및 수준의 독서를 통해 변화될 수 있는 인지적/정서적 능력을 뜻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의 몇 단계로 나뉘볼 수 있다.

- (1)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지식 습득력)
- (2-1)독서를 통해 저자 및 등장인물의 관점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관점 전환력)
- (2-2)독서를 통해 저자 및 등장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능력(공감력)
- (3)독서를 통해 자신만의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통찰력)

독자들은 (1)단계에서 출발하여, 독서력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3)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물론 독자들마다 해당하는 단계는 다 다를 것이다. 만일 ‘시민의 품격’이라는 것을 각 시민의 독서력을 더한 후에 시민의 수로 나눈 값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은 어디쯤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위치는 다른 선진국가나 복지국가들의 위치와는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할까? 이에 대한 분석은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책을 읽지 않는 시민과 지도자들이 인지/정서 측면에 미성숙한 존재들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참고문헌〉

- 니콜라스 카 저/최지향 역(2011),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청림출판.
- 장대익(2017), 『다윈의 정원』, 바다출판사.
- Berns G. S., Blaine K., Prietula M.J., & Pye B.E.(2013). Short- and Long-Term Effects of a Novel on Connectivity in the Brain, *Brain Connectivity*, 3(6), 590-600.
- Johnson, D. R. (2012). Transportation into a story increases empathy, prosocial behavior, and perceptual bias toward fearful express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2), 150-155.
- Kidd, D. C., & Castano, E. (2013). Reading literary fiction improves theory of mind. *Science*, 342(6156), 377-380.
- Tomasello, M.(2014), *A Natural History of Human Thinking*, Harvard University Press.



차기정부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발제 2

# 출판문화진흥정책 이대로 좋은가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 발제문 2

## “ 출판문화진흥정책 이대로 좋은가 ”

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대표, 한국출판학회 출판정책연구회장)

우리 사회는 점점 책을 읽지 않는 책맹(冊盲) 사회로 추락하고 있다. 입시 위주 교육제도와 양극화된 사회 시스템, 희망 없는 고단한 삶이 책 읽기를 멀리하게 만든다. 그것은 출판의 위기로 귀결된다. 좋은 책이 만들어지기 어렵고 읽지도 않는 악순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상상력과 융합적 지혜가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한 기반인 독서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출판이나 독서를 진흥하자는 법(출판문화산업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등)과 진흥기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을 모두 갖춘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진흥’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크되 민간의 자율적인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흥’자 붙은 법과 기관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최소한 법과 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여 그 이름에 부합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이를 만나기는 어렵다. 이제는 새로운 도약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차기 정부가 시행해야 할 출판정책에 대해 진단하며 각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 추락하는 책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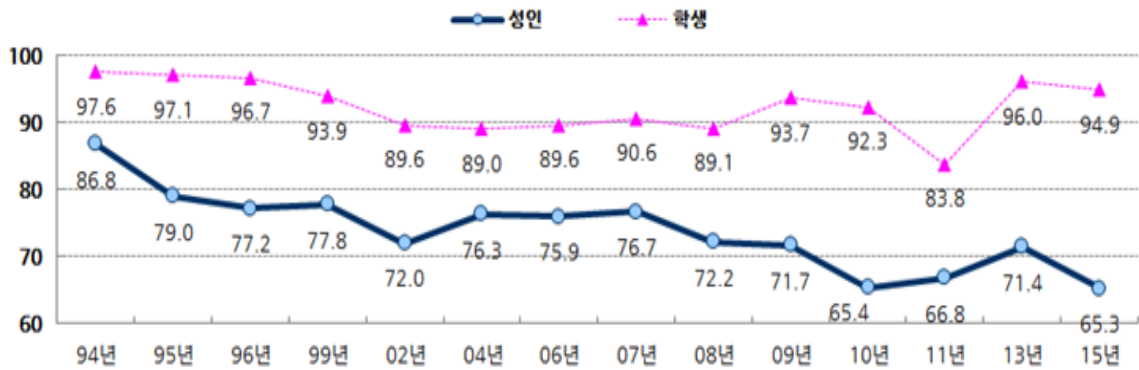
출판 진흥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출판물의 사회적 중요성과 가치가 매우 높은 반면,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소비재 상품(소품종 대량생산)과는 반대로 다품종 소량생산에 따른 시장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활자 매체의 특성상 매체 이용자의 문해력과 독서 선호도, 독서 습관, 도서 구매력 등에 기반한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다매체 환경에서 독서인구나 출판시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언어권 시장 규모가 작고 학습참고서 중심의 출판시장이 구조화된 나라에서 일반도서의 생산-유통-소비는 악순환을 면하기 어렵다.

성인의 연간 독서율은 1994년 86.8%에서 2015년 65.3%로 21.5%포인트가 줄며 연평균 1% 정도씩 감소했다(〈그림 1〉 참조). 최근 5년간 성인 연평균 독서량은 2010년 10.8권에서 2015년 9.1권으로 1.7권 줄었다. 같은 기간 동안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은 32분에서 22.8분으

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산업 측면에서는 학습참고서 등을 제외한 일반도서 기준 출판시장 규모가 2010년 1조 4,063억 원에서 2015년 1조 2,084억 원으로 14.1% 줄었다(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통계). 1종당 평균 발행부수는 2010년 2,745부에서 2015년 1,880부, 2016년 1,457부로 무려 47%나 감소했다(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대행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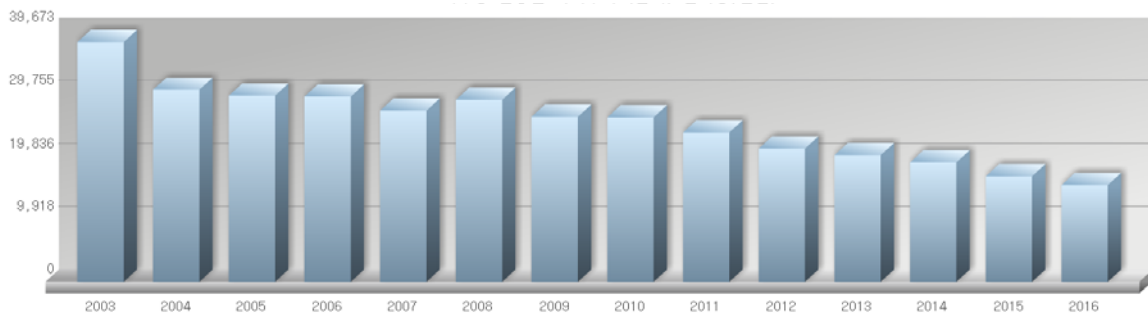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 통계청이 집계한 가계의 도서구입비 추이다.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입비는 2003년 37,793원에서 2016년 15,234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거의 매년 축소되었다(〈그림 2〉 참조). 이러한 도서구입비 감소는 절대 액수만이 아니라 전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전체 지출 중에서 학습참고서를 포함한 책 구입에 쓴 비중은 2003년 1.3%에서 2016년 0.45%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지난 6년 사이에(2010년~2016년) 가계 지출 총액은 2.3% 증가하고 오락문화비도 12.9% 증가한 반면 서적구입비만 유독 41.2%나 대폭 감소했다(〈표 1〉 참조). 2016년의 경우 인터넷서점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출판시장 하락의 저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없지 않지만, 전반적인 출판환경은 매우 척박한 수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림 1〉 국민 독서율 추이(1994~201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출판연구소, 국민 독서실태 조사(1994~2015년)

〈그림 2〉 가계 월평균 도서구입비 추이(2003~2016)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표 1〉 월평균 가계 지출 추이(2010~2015)

연도	2010년	2016년	2010 → 2016 증감 비율
가계지출액	3,251,905	3,329,104	2.3%
오락문화비	130,129	146,948	12.9%
서적구입비	25,921	15,234	-41.2%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전국 가구 기준)에서 재구성

### 출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의 출판정책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이에 의거한 5년 단위의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집약되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7~2021)〉을 올해 2월 16일 발표했다. ‘책으로 도약하는 문화강국 실현’이라는 비전과 ‘출판생태계의 자생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4대 추진전략(지속성장 기반 마련, 출판유통 선진화, 출판콘텐츠 투자 활성화, 출판콘텐츠 수요 확대) 및 16대 핵심과제, 48개 단위과제를 제시하는 등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표 2〉 참조). 계획의 타당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단위 과제마다 여러 사업들이 주렁주렁 나열만 되어 있지 구체성이 결여되어 추진 체계와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부터 걱정이 다.

문제는 추진력이다. 아무리 참신하고 의욕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 해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2016년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을)은 지난 5개년 계획의 5대 정책과제의 23개 중과제(사업군)에서 계획대로 실행된 것은 4개 과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11개 과제는 부분적으로만 시행되었고, 8개 과제는 미시행 상태로 방치되었다고 지적했다. 시행된 사업들은 기존에 시행되던 사업이거나 유사 사업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출판계에서 중시한 ‘출판통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같은 사업은 시행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 진흥계획이 있어도 실행되지 않는다면 진흥정책은 없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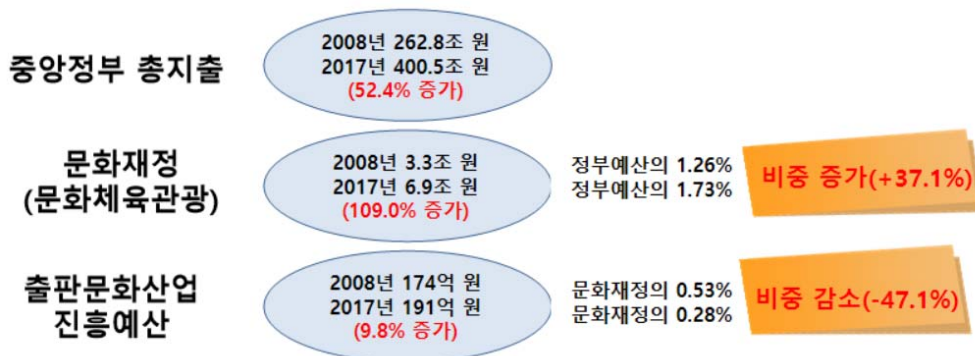
〈표 2〉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17~2021)’의 전략별 추진과제와 세부과제

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 지속성장 기반 마련	·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핵심법제 개선	· 출판문화산업진흥법령 개정 추진 · 출판계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실태조사 · 조세관련법 등 기타 법령 개정 협의
	· 진흥원 개편 및 연구센터 설립	· 진흥원 개편 및 연구센터 설립 (범출판계 정책기획단 설립, 한국출판산업연구개발센터 출범) · 출판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출판정보위원회 출범
	· 콘텐츠산업의 핵심으로써 인식 확산	· 출판(산업) 인식에 대한 기초조사 · 출판(산업) 인식 제고 캠페인 등 추진
	· 출판산업 고급인력 활용 및 창업 지원	· 인문계분야 고급인력 취업 지원 · 출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 출판유통 선진화	· 출판유통 선진화 체계 구축	· 한국출판유통정보센터 설립 추진 · 전근대적 출판 유통 관행 개선 · 도서정가제의 합리적 보완·개정 및 정착 · 출판물 불법유통 신고센터의 역할 제고 및 운영 개선
	· 지역서점 상생발전 체계 구축	· 지역서점 통합 전산망 구축 · 지자체 지원 지역서점 활성화 체계 확산 · 지역서점 활성화 기반 마련 (서점지원센터 신설, 지역서점 작가 강연 지원 등)
	· 글로벌 수출 지원 체계 구축	· 주요 거점별 해외수출사무소(K-Book Office) 운영 ·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한한령 대응 등 진출 강화 · 수출정보 플랫폼 등 인프라 강화 ·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및 교류 · k-book 커뮤니티 개설
	· 수출콘텐츠 개발 및 현지화 지원	· 시장 맞춤형 수출콘텐츠 발굴 · 수출콘텐츠의 시장 친화적 번역 지원 · 국내발행 도서(한글, 번역서)의 해외진출 지원
· 출판 콘텐츠 투자 활성화	· 출판기금 확충 및 출판콘텐츠 투자 활성화	· 출판재단 기금 확충 · 북펀드 등 출판산업 펀드 조성 지원
	· 출판콘텐츠 다중활용 등 비즈니스 활성화	· 출판콘텐츠의 다중활용 활성화 · 북테크 비즈니스 지원체계 수립 · 원천콘텐츠로써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 중견(강소) 출판사 육성 및 TOP5 콘텐츠 개발	· 글로벌 중견(강소) 출판사 육성 · 세계 출판시장을 이끌 TOP 5 콘텐츠 개발
	· 지역 핵심 거점별 출판 인프라 구축	· 거점별 출판 인프라 확충 · 북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단계적 확대 추진 · 출판산업 지원기관 운영
· 출판 콘텐츠 수요 확대	· '18년 책의 해 지정 추진 등 출판수요 진작	· 2018년 책의 해 지정 추진 등 출판수요 진작 ·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증액 추진 · 주요 상업시설 내 도서열람, 판매 활성화 · 세종도서 선정 보급 및 청소년 북토론 지원 · 출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지원
	· 전자책, MCN 등 청년층 출판수요 확대	· 전자책 읽는 지하철 서비스 사업 추진 · Book MCN (Multi Channel Network) 사업 추진 · 독서 활성화 사이트 및 플랫폼 운영
	· 휴먼큐레이션 등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 독서분야 휴먼 큐레이션(Human Curation) 활성화 지원 · 국민 참여형 북콘서트 개최
	·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독서운동 추진	· 지역 독서공동체 조성(도서관 확충, 독서진흥조례 확산) · 인문독서예술캠프 운영 ·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및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 실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7.2.1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2016년에 집행한 예산은 363억 원이었다. 출판 및 독서 진흥 예산을 합한 총액이다. 이 가운데 독서진흥 사업인 세종도서(우수도서) 구입·배포 예산이 14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진흥원 운영 및 각종 사업 지원 예산이 100억 원, 독서 문화 증진 사업이 약 29억 원, 전자출판 육성 25억 원, 국제교류사업 지원 약 22억 원, 파주 출판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10억 원 등이다. 총예산도 부족하지만, 블랙리스트 시비에 오른 세종도서 구입비나 각종 행사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출판산업 인프라 구성에 쓸 예산은 거의 없다. 2017년 출판진흥 예산은 진흥원 지원비(104억 원)를 포함하여 191억 원에 불과하고, 중앙정부 총예산 및 문화재정에 비추어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 10년 사이 전체 문화재정은 3.3조 원에서 6.9조 원으로 109% 증가한 반면 출판진흥 예산은 증가율이 9.8%에 불과했고, 문화재정에서 출판진흥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의 0.53%에서 올해 0.28%로 반감되었다. 이에 비해 상업성과 자생력,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춘 게임산업 육성 예산은 2016년 458억에서 2017년 642억 원으로 40.2% 늘어났다. 국가 정책이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얼마나 무시하고 홀대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화산업의 기간 산업인 출판의 중요성에 기반하여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조용한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으로 출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지 않고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 또는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로 큰 변화 없이 기존 정책을 연장하는 데 급급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림 3〉 지난 10년간 정부 예산 추이 (2008년 → 2017년)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및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재구성

현행 출판진흥 정책은 세종도서를 비롯한 지원 사업이나 국제 행사 후원 등 일과성 예산 집행이 대부분이다. 출판산업의 토대를 넓히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인프라 구축과는 거리가 있다. 진흥원(2012.7. 설립)은 60명이 넘는 인력이 있지만 조사연구나 정책개발 담당은 푼기조차 어렵다. 산업 환경 변화에 조용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조차 없이 어떤 진흥정책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제 사업 집행은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고,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발, 법제 개선 등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과감한 변신이 필요하다. 출판진흥을 소명으로 삼은 법정기구인 진흥원에 대한 정책 고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사실상 리셋(reset) 수준의 조직 및 업무 개편이 필요하다. 지난 3월 29일 문학, 출판, 서점, 도서관, 독서, 교육 관련 20개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대통령 후보 공약 제안 성명서’에서 “진흥원을 가칭 ‘독서출판진흥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 주도의 독립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 책 생태계를 살리는 선봉에 서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 책 생태계 살리는 ‘인프라 조성 정책’ 절실

향후 출판정책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출판학회가 수행한 연구용역 과정에서의 공청회는 있었지만 문체부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공개 검토가 없었다. 산업계 종사자는 물론이고 책 생태계와 관련된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사업들을 공개적으로 의논하고 검증하는 절차조차 생략되었다. 통과의례적인 계획을 만들고 의무방어전을 치루는 것 같은 정책 발표가 아니라, 정책 고객들이 공감하고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과 정책 콘텐츠의 실질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판 단체들과 더불어 매년 정책 성과의 점검과 계획 조정을 통해 출판정책의 정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의 출판정책 방향은 책 생태계 전체를 키우고 발전시키는 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 생태계 융합형 행정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 현재는 출판, 도서관, 독서 정책 부서가 긴밀한 연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세 지붕 세 가족’ 상태다. ‘한 지붕 세 가족’이 되도록 해야 한다. 프랑스의 ‘도서·독서국’은 좋은 선례다. 출판산업과 도서관, 독서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횡단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지려면 행정 부서부터 융합형으로 짜일 필요가 있다. 가칭 ‘독서출판국’을 신설해야 한다.

세부 정책으로는 우선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병영도서관 등 관종별 도서관이 OECD 꼴찌 수준에서 벗어나 소임을 다하도록 신간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도서구입비가 대폭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지자체나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확보하여 교부할 필요가 있다. 신간 구입비조차 없어서 공공도서관들이 시민과 이용자, 출판사에 기증 도서를 요청하는 민망한 일은 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진귀한 풍경이다. 평균 발행부수가 1,500부도 안 되고, 몇 백 부밖에 찍지 않는 학술도서가 흔할 만큼 출판환경이 악화된 환경에서 좋은 책 만들기의 염원은 고되다. 더 이상 개인의 책 구입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초판 정도는 도서관 구입으로 소화시켜줘야 최소한의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빈사 상태인 출판계의 비원이다.

예산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제대로 된 법제이다. 실질적인 출판 진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오랜 염원 중 하나는 ‘완전한 도서정가제’ 시행이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말만 정가제이지 정가의 15%까지 모든 책의 직간접 할인율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사실상 15%만큼의 거품 가격을 조장한다. 그리고 구법 판례에 근거한 문체부의 제3자(카드사) 제휴카드 40% 추가 할인 묵인, 문체부 스스로 오프라인서점의 15% 추가 할인을 돕겠다며 1년 전에 카드사와 연계해 도입했다가 400장 정도밖에 발행하지 못 했을 만큼 완벽하게 실패한 ‘문화융성카드’, 각종 쿠폰 발급에 의한 우회 할인, 전자책의 할인 편법인 ‘10년 대여’ 서비스 등 많은 제도적 문제점들이 여전하다. 독자는 거품 가격이 없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책을, 다양한 유통경로로 구입하기를 바란다. 현행 정가제는 그러한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과는 거리가 먼 표리부동의 ‘가짜 정가제’다. 문화적 공공재인 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프랑스나 독일처럼 거품 가격이 없고 일물일가(一物一價)의 원칙에 충실한 정가제를 하루 빨리 확립해야 한다. 어떤 의욕적인 진흥정책도 완전한 도서정가제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지만 문체부의 확고한 정책 철학과 의지를 찾기 어렵다. 전국적으로 서점이 많아져야 출판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다. 완전한 도서정가제는 지역 서점과 개성이 넘치는 서점들의 존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 완전한 정가제가 있어도 책이 안 팔려서 문제이건만, 정가제까지 엉망이라면 무슨 신출귀몰할 진흥정책이 통할 수 있겠는가. 도서구입비 세제 혜택,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판면권·사적복제보상금·공공대출권 도입 및 출판권자에게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지급, 출판진흥기금 조성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 개정 요구에는 인터넷서점의 비정상적인 신간 할인 판매 방식인 50% 바이백(페이백)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 파괴적인 방식의 기업형 중고책 매매 행위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서점들은 새 책을 판매하는 단계부터 현 책 매입(바이백)을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삼아 사실상 반값 할인으로 신간을 판매한다. 나아가 전국 단위로 오프라인 중고책 매장을 확대시키며 중고책 매매를 가속화시켰다. 오픈마켓을 통해 중고책 판매자와 구매자의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도 챙긴다. 새 책 판매에 사활이 걸린 출판사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비정상적인 2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건만 출판계는 속앓이만 하고 있다. 국내 중고책 시장 규모는 이미 수천억 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새 책 시장의 판매기회 손실은 낮춰 잡아도 1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래 베스트셀러 판매량이 예전과 달리 절반 이하로 떨어진 데는 독자의 구매력 저하뿐 아니라 인터넷서점의 중고책 매매 활성화가 끼친 악영향이 지대하다. 산업 가치사슬의 절취(截取)이자 출판 생태계 선순환 구조의 왜곡이다. 독자들의 중고책 매매는 갈수록 증가 추세다. 새 책의 판매를 통해 다른 새 책의 생산·유통·판매가 이루

어질 수 있는 물적 기반을 출판산업 내부에서 절단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막아야 한다. 나아가 민간 출판활동을 위축시키는 상당수 공공기관의 상업출판 행위나 EBS-수능 연계 출제 문제 같은 ‘행정 폭력’을 조속히 근절시켜야 한다.

나아가 출판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오디오북과 전자책, POD(Publishing on Demand)를 비롯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미래 먹거리를 마련해야 한다. 의욕적인 출판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자금 지원, 출판유통 선진화와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싱크탱크 운영,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체계 등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서울북인스티튜트(sbi) 중심의 출판교육 체계화와 지원 확충도 요구된다. 또한 기존 서점과 신규 창업 서점의 교육, 경영 컨설팅, 용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점지원센터’ 운영, 서점과 작가의 연계를 지원하는 ‘서점에서 만나는 작가’ 플랫폼 지원, 기초 지자체 안의 서점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서점 상품권’ 발행과 같은 종합적인 서점 육성 지원책을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서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수익모델 연구를 포함한 서점 육성 종합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서정책의 혁신이 요구된다. 대통령 산하기관으로 독서재단을 운영하며 방대한 사업을 펼치는 독일 사례처럼 ‘독서진흥재단’을 민관 거버넌스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독자 대상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영국과 같은 ‘독자 개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비독자를 독자로’ 만들고 사회적으로 독서를 촉진하는 전략들을 만들어 풀뿌리 독서 관련 단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사회 영역별 독서(진흥)지수 도입, 독서 포털 사이트 운영, 계층별·분야별 ‘독서의 해’ 운영, 북스타트를 비롯한 생애주기별 독서 생활화 프로그램의 확대 개발 및 파일럿 프로그램 지원 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책 읽기는 시민이 스스로의 생존력과 자존감을 키워 나가는 기초이므로 생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독서권’을 보장해야 한다.

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정책 단위에서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국가가 그 책무와 중요성을 알고 투자해야 한다. 누가 대통령을 하든 책에 방점을 찍도록 견인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첩경이며,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숙성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책이 문화정책의 기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출판정책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차기정부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발제 3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독서사고 표현과 책의 미래

이민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발제문 3

##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독서사고 표현과 책의 미래 ”

이민호(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1. 제4차 산업혁명에서 무엇을 읽을 것인가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를 핵심 의제로 삼았다. 이때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것이 핵심 목표이며,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접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대표적인 기술로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IoT), 무인자동차, 3D 프린팅, 나노와 바이오 공학 등을’<sup>1)</sup> 들었다. 특히 속도(Velocity), 범위(Scope), 영향력(System Impact) 등에서 이전 산업혁명과 차별화될 것이라 진단하였다. 이처럼 가늠할 수 없는 기술변화의 속도 속에 현재 산업 전 분야는 파괴적이라 할 만큼 경계가 무너질 것이며, 새로운 시스템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산업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기술 기반의 플랫폼 발전으로 공유 경제(Sharing Economic), 온디맨드 경제(On Demand Economy)가 부상
-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및 사업 모델이 증가하면 쉽게 창업이 가능(Start-up)<sup>2)</sup>

이러한 산업의 변화는 출판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판인들 간의 협력적 커뮤니티를 강화하여 유무형의 자원 전부를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기해야 하며, 수요자로서 독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략을 피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출판산업 진입의 수월성을 제고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1) 정민, 「현안과 과제 : 2016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4차 산업 혁명’, 글로벌 성장 원동력으로」, 『이슈리포트』 16권2호, 2016, 9쪽.

2) 위의 글, 10쪽.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 박근혜 정부는 2016년 9월 21일 중장기전략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단 간담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3대 중점과제<sup>3)</sup>로 선정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09. 21)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시장의 ‘승자독식’이 심화되고 ‘20년까지 5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과 일자리에도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경직적 노동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개혁,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개혁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충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언급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국내문제에 착중시켜 바라보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창조경제는 점차 국가 간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인간의 창의성과 아이디어 등을 활용하여 기존에 존재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다양한 결과물 등을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경제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sup>4)</sup>’한다는 정책패러다임의 모호성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문화융성 정책’의 개념적 모호성<sup>5)</sup>과도 연결된다.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설계한 ‘책의 미래’ 청사진은 불투명하다.

제4차 산업혁명은 공포와 희망을 동시에 지닌 아이러니 상황이라 할 수 있다.<sup>6)</sup>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쟁점은 생산성 향상의 기대감과 일자리 대체에 대한 우려이다. 인간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는 희망과 동시에 양극화의 공포가 공존하는 것이다. 이처럼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할 사건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다시금 재정립하게 되는 철학적이거나 인문학적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 ‘책의 미래’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인간중심 경제 패러다임 본격화’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태도는 과거 정부의 적폐를 답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궁극적으로 차기 정부 출판문화 정책은 인문학적 사유를 토대로 모색되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3)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자본 등을 3기 위원회의 중장기전략 중점 수립과제로 제시했음.

4) 차두원, 「창조경제 개념과 산업 활성화 방안」, 『국토』 6월호 (통권380호), 2013, 10쪽.

5) “문화융성위원회의 설명에 의하면 문화는 행복을 만들고, 경제를 살리고, 마음을 열게 하고, 국격을 높이는 네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치를 갖는 문화는 사실 ‘삶의 양식’이라는 인류학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탁월성을 강조하는 협의의 개념이다.”(김정수, 「‘문화융성’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가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2016, 188쪽).

6) 배영임·신혜리, 「인공지능의 명암」, 『이슈&진단』 260호, 2016, 1~26쪽.

## 2. 지난 300년은 기계와 시인이 만든 역사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출판산업은 공유경제 틀에서 자유로운 시스템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부의 출판문화 정책이 구체적으로 인프라를 제공하고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출판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때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출판산업이 이동할 때 정부의 출판문화 정책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단으로서 수요자, 즉 독자를 한정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급자인 출판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수요자인 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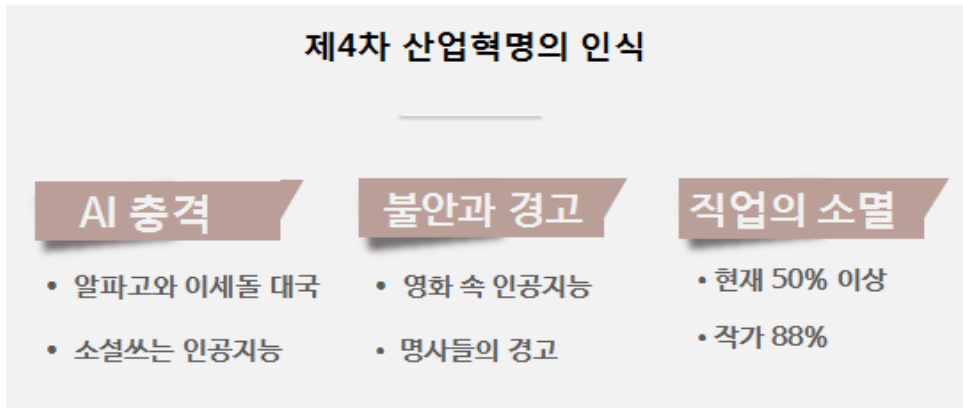
신언서판(身言書判)이란 말이 있다. 고래로 인재를 등용하는 네 가지 기준이자 인간됨이다. 말하고, 읽고, 생각하는 인간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수요자로서 독자의 성격으로 재구성해도 손색이 없다. 이때 독자는 독서하고 사고하고 표현하는 존재로서 총체적인 인간으로 재인식되어야 한다. 이는 ‘책 읽는 대통령’의 면모라 할 수 있다. 즉 신언서판을 겸비한 ‘한국 문화적 지도자의 개념’<sup>7)</sup>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차기 정부의 리더십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민주적 사유를 겸비한 한 사람의 독자여야 한다. 신언서판은 ‘곧 인문학이다. 넓게 배우고, 자세하게 묻고, 삼가서 생각하고, 밝게 뜻을 표현하고, 돈독하게 생각하면서 실행하는 인물<sup>8)</sup>’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경계허물기와 기술융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출판산업의 중심으로서 자리할 독자의 정체성이다. 그러한 인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에 있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읽는 독자이자 표현하는 독자로서 작가의 위상을 부여할 수 있는 출판문화 정책의 변환이 필요하다. 독자는 책의 수요자이자 책의 생산자로서 상정하고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소수의 전문화된 작가 지원에서 벗어나 각자의 생애 기록자로서 양성될 수 있도록 정책의 다양성, 유연성을 기해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독자들은 공교육의 현장을 떠나 사회로 진출하면서 문학현상 내에서 독립된 자아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이동하고 있다.”<sup>9)</sup>는 반성에서 비롯한다.

지난 산업혁명 시대 무엇을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였는가. 이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독서사고표현의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며 책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토대라 할 수 있다.

7) 최상진·박희량·박무익, 「한국 대학생의 대통령 후보선택에 관여되는 한국적인 Parameter 탐색」,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제1호, 1997, 614쪽.

8) 조순, 「‘신언서판’이 곧 인문학이다」, 〈석학과 함께 하는 인문강좌〉 3월 11일, 2017.

9) 김동환, 「비평 능력 신장을 위한 문학 독서 교육」, 『독서연구』 20권, 2008, 114쪽.



위의 그림에서 보듯 지난해 두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 바둑을 두어 이겼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일본의 ‘호시 신이치 공상과학 문학상’ 공모전에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바둑 프로기사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인 알파고(영어:AlphaGo)가 대국을 벌였다. 5번기 공개 대국에서 예상을 깨고 최종전적 4승 1패로 알파고가 승리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알파고가 ‘우주 전체의 원자 숫자보다 더 많은 조합과 배열이 가능’하다는 바둑의 오묘한 경지를 단숨에 넘어버렸기 때문이다. 바둑을 두려면 직관과 창의력이 필수적인데 이는 다분히 인간의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그대로 수행하였으니 경이로움을 넘어 공포를 느끼게 했다.

알파고의 등장 이후 얼마 되지 않아 3월 21일 마쓰바라 진 하코다테미래대학 교수팀이 4년 전부터 시도해 온 인공지능과 관련한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즉, 자신들이 개발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일본의 저명한 공상과학(SF) 소설가 호시 신이치(1926~1997)의 작품을 물려받는 신작을 작성하는 것이다. 프로젝트팀은 단순히 소설을 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매년 열리는 ‘호시 신이치상’에 인공지능이 쓴 소설을 출품해왔다. 이 결과 인공지능이 완성한 작품 가운데 일부가 이 소설상의 1차 예심을 통과했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영화 속에서 만났던 인공지능은 늘 째름했다. <트랜센던스>, <스타 워즈>, <터미네이터>,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1968), <매트릭스> 등. 영화 <터미네이터>에서는 기계가 인간을 몰아내는 세상을 보게 되었고, 미래의 인공지능로봇 T-101이 징그럽게 달라붙었던 장면에서 기겁을 했다. <매트릭스>에서는 기계가 인간을 모두 사로잡아서 열전지로 만들어버리는데 인간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펼친다. 특히 스미스 요원처럼 ‘인간은 바이러스나 다를 바 없다’라면서 인류 절멸을 선언한다. 애니메이션 <사이코패스>에서는 안정적인 삶을 목적으로 인간 스스로 통제 시스템에 모든 선택을 맡겨버리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 영화 <아이, 로봇> 속 인공지능 비키는 ‘인류 문명을 지키기 위해선 인간 개개인의 자유



를 통제해야 한다'고 선언하며 지배에 나선다. 영화 <메트로폴리스>에서 로봇이 독재자의 명령에 따라 노동자의 여신이라 불리는 여성 마리아로 변장해 노동자를 선동하고 파괴한다. 영화 <워게임>에서 컴퓨터광인 주인공은 미발매된 컴퓨터 게임을 입수하려다 우연히 북미전략사령부(노라드)의 컴퓨터에 접속해 핵전쟁 시뮬레이션을 작동시키고 만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착각한 노라드의 인공지능 조슈아가 '핵전쟁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소련에 선제 핵공격을 준비하면서 3차 대전의 위기가 다가온다.

이에 대해 세계 유명 인사들이 한 마디씩 거들고 있다.<sup>10)</sup> 칼 프레이, 마이클 오스본 옥스퍼드대 교수는 2013년 발표한 '직업의 미래'란 보고서에서 앞으로 20년 내 현재 직업 중 약 47%가 없어질 것이며 대표적 직업 중 하나로 작가를 꼽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작가가 사라질 확률은 88%에 달한다. 미국 MIT 에릭 브린올프슨 교수는 기계와의 경쟁 속에서 인간들이 디지털 기계를 파괴하는 제2의 러다이트운동이 벌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스티븐 호킹은 2014년 11월 2일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The development of full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spell the end of the human race." 라고 말하며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류 종말이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빌 게이츠는 "나는 초지능(Super Intelligence)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며 "우선, 기계는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해줄 수 있지만 초지능은 그렇지 못하다."며 "만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 십 년 후에는 (인공)지능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sup>11)</sup>

이러한 공포와 우려 속에는 기계와 인간의 경쟁을 상징하는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그림에서 보듯 3차에 걸친 지난 300년간의 산업혁명의 흐름을 살펴볼 때 기계와 인간의 관계는 경쟁을 넘어 새로운 통섭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



10) 우병현, 「[반 발 앞선 미래] 사람이 기계를 보조한다?」, 『샘터』6월호, 2015, 96~97참조.

11) 스티븐 호킹과 빌 게이츠의 언급과 관련 "지승도, 『인공지능, 붓대를 꿈꾸다 :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운주사, 2015"를 참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다는데 상징적이다. 인간을 새롭게 바랄 볼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산업혁명 발생지 유럽에서는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영국에서는 노동권의 신장이 이루어지며, 프랑스에서는 공교육이 강화되고, 독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된다. 이런 가운데 낭만주의 시대 대표적 시인 워즈워스는 도시문명의 악몽과 같은 공포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 보호받으려는 욕망을 시로 형상화한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자동차의 발명이 대표적 동인이었다. 그러나 인간 편의에 따라오는 악영향도 만만치 않았다. 러다이트 운동을 비롯 인간 불평등에 대항하는 혁명이 곳곳에서 발발했고, 급기야 1차, 2차에 걸친 세계 대전까지 치러야 하는 비극적 상황을 맞는다. 이때 시인들은 단순히 노래하는 낭만적 시인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시인으로 바뀌었다. 사물의 실상을 그대로 보고자 하는 절박한 상황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르러 상징주의적인 서정시학이 풍미하였고, 영국시는 고전주의를 극복하였듯이 고답파, 자연주의 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정보화, 인터넷, 자동화 생산시스템으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 시대는 공통된 사상적 기반이 무너지며 다원론적인 세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시인은 분열된 자아의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역설적으로 인간 삶의 의미를 다시금 구축하려 한다. 오히려 최종적인 진리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인간의 모습을 구가하려 했다.

이러한 흐름의 핵심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가 늘 자리하고 있다. 이때 시인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총체적 인간으로 더욱 구체화된다. 책은 이러한 인간의 전체를 담은 집적물이라 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책과 인간의 정체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특히 인공지능을 왜 두려워하는가. 이는 존재적(철학적) 불안 때문이다. 그 밑바닥에는 비인간적 상상력(죄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산업화, 경제화 논리 속에 자리하고 있는 전지전능을 꿈꾸는 욕망과 인간소비의 폭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포를 제거하는 일은 신언서판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가운데 성취된다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책이 담아야 할 내용(콘텐츠)이라 할 수 있다.

### 3. 책의 미래는 인간의 미래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기계화, 곧 비인간화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되었다. 오직 과학문명만

이 지상낙원을 건설할 것이라는 소망이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시인(인간, 독자, 책)은 기계문명을 예찬하고 박수를 보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기림을 위시한 30년대 모더니즘 시인들이 기계화한 산업문명을 동경하여 공장 굴뚝에서 솟아나는 연기와 자동차의 질주하는 소음을 시로서 예찬했다. 과학문명은 뒤에 깊숙이 야누스의 두 얼굴 숨기고 있다. 도시집중화로 농촌의 황폐화, 도덕성의 실추, 인간성의 상실, 자의식의 분열, 실존적 부조리, 소외의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가운데 시인(인간, 독자, 책)이 직면한 것은 ‘위기의식’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상실된 인간성과 훼손된 자연을 회복시켜서 공존하는 것이 시인(인간, 독자, 책)에게 부여된 과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인간, 독자, 책)도 구체성(과학)의 길을 걸었다. 이것이 산업혁명 이후 시(책)의 본질이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차기 리더십의 중요한 덕망이며, 차기 정부의 출판문화 정책의 밑바탕이며, 출판산업이 집중해야 할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늘 스스로 자신이 무엇인가 묻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회의하고 부정한다. 인공지능이 따라 할 수 없는 화두이다. 책이 곧 인간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책의 소멸은 어떤 형식적, 기능적 변모일 뿐이다. 그동안 우리가 염려했던 것은 책이라는 거죽의 붕괴이다. 내용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뚝뚝 떠다닌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독자로 불러야 한다. 독자를 책에 담자.



차기정부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

토론

정우영 시인, 신동엽학회 회장

안찬수 책임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김한청 한국출판인회의 기획정책위원장, 도서출판 다른 대표

박효상 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담당 상무이사, 사람in 대표

정성훈 서울서점조합 대외협력위원장

박세중 언론노조 출판노협 의장



## 토론문 1

## “ 문자가 사라지지 않는 한, 출판은 계속된다 ”

정우영(시인, 신동엽학회장)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라 하는데, 아니다. 상상력이다. 내가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게 제품이 되고 팔리게 될 것이다. 상상력이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상상하라, 실현된다.”가 미래의 슬로건이다. 로봇이나 기술이 거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을 테지만, 상상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 나는 바로 이 점이 책(문학)의 미래가 밝은 이유라고 본다. 물론, 그 매개체가 종이책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어떤 형식이든 문자를 담는 책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나는 바로 이 ‘책’이 곧 산업의 소스이자 정보이며 매뉴얼인 시대가 온다고 믿는다. 책으로 만들어진 문학으로 상상하고 인공지능이 이를 구현하는 것이다.

출판산업은 그런 점에서 미래산업이다. 사양산업이 아니다. 문자가 존재하는 한 유사 이래 이제껏 그래온 것처럼 출판은 영원할 것이다. 흔히 문자적 상상력을 무시하기 일쑤인데, 그렇지 않다. 시각적인 이미지로 구현된 상상력은 만 명이 하나의 캐릭터를 만나지만, 문자로 구현된 상상력은 만 명이 만 개의 캐릭터를 만난다. 또 이미지 상상은 보이는 것 하나이지만, 문자적 상상은 각 개인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이다. 무한 상상이 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에서 이보다 대단한 산업적 소스가 어디 있겠는가.(이런 면에서 장대익 교수님의 <독서력과 시민의 품격> 발제문에서 큰 힘을 얻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하지만, 출판이 이와 같은 미래 산업의 소스가 되기 위해서는 출판사와 출판인들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 지금처럼 출판 행위가 종이책 위주로만 이어진다면 출판은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 이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아날로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제 출판 행위는 종이책과 함께 모바일 책, 웹북, 오디오북 등으로 그 범주가 넓혀져야 하며 독자와의 상호텍스트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모든 출판인은 스스로가 4차 산업혁명의 주체로서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상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쇄, 제작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 책에 맞게 최적화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발제자 분들이 책과 출판, 독서의 중요성은 다양하게 짚어주셨고 이미 지난 10월 29일, 책생태계 관련 단체들이 <책 읽는 대통령, 책이 문화정책의 기본인 나라>에서 10가지 문화정책을 제안도 했으므로 이쯤으로 내 견해를 정리한다. 다만, 아쉬우니 내 생각 중 하나만 말씀드리려 한다.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적 출판 일괄시스템을 구축하라.” 조심스럽게 나는 이 방안을, 출판 인큐베이팅 지원시스템으로 제안하고 싶다. 앞에서 말한 상상력을 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재들이 출판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빌어먹기 딱 맞다. 송인서적의 부도가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해결책은 있는가. 불행히도 마땅한 대책들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나는 혼자 몽상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같은 정책 조직이 아니라, 출판 공동 제작소 같은 실행 기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고.

1인 출판사가 적잖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출판 편집, 디자인, 인쇄, 제책, 유통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구가 있으면 된다. 출판사는 소프트웨어만 기획하고 나머지는 공공적인 기구가 다 대행하는 것이다. 물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은 출판사와 기구가 공동 분담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파주출판도시 같은 건물 공간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계들로 움직이는 공장 지원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다. 편집, 인쇄, 제작, 유통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공동 제작소와 공동유통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야말로 1인 출판의 무한한 상상력이 현실이 될 것이며 비용 또한 엄청나게 줄어들 것 아닌가.

물론, 이는 인큐베이팅 지원 시스템이므로 일정 정도 기반이 갖춰진다면 해당 출판사는 다른 출판사에게 그 기회를 양보해야 할 것이다. 어디 1인 출판사뿐일 것인가. 이렇게만 된다면, 웬만한 출판사들은 다 이와 같은 일괄시스템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자연히 통계가 제대로 잡힐 것이고 이 잡힌 통계로 출판산업은 계획적인 순환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게도 된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규모 있는 출판 경제도 충분히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정보가 어두운 나는 보다 직접적인 여러 지원책이 있음에도 알지 못해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지도 모른다. 혹 그렇다면 문외한의 헛발질로 여겨주시길 바라고, 그게 아니라면 이러한 일괄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된 출판 프레임 아닐까 생각하는 제 견해에 귀 열어 주시길 당부 드린다. 한시적이고 개별적인 사업이나, 텍스트 지원 방식은 이제 벗어나야 한다. 생산자나 수요자, 매개자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럴 때 누군가는 유통 현대화를 이야기하고, 누



군가는 출판 현대화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규모 있는 대형출판사라는 전제가 깔린다. 소규모 출판사는 안중에도 없는 대안이다. 내가 보기에, 곧 다가올 미래는 지금과 같은 출판형태에 그 답이 있지 않다. 소규모지만 뛰어난 상상력을 발휘하는 출판 집단들이 총아이다. 이들을 살려야 출판의 미래가 두터워진다. 따라서 나는 소프트웨어는 출판사가, 하드웨어는 공동체적 공공기구가 맡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해결책 아닐까, 열심히 궁리해보는 것이다.

내 제안을 들으며 예산 굴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도대체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야? 하고. 난 분명히 앞에서 '몽상'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이 말씀만은 드리고 싶다. 멸절한 산과 강들을 깎고 막고 하며 해치느라 이명박 정부에서 들인 돈이 수십 조 원이다. 어떤 환경운동가는 100조 원을 들인다 해도 망가진 산하를 원상복구하기 어렵다고 한다.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지 모르지만, '이명박의 산하 망치기 사업'에 비하면 이쯤의 투자는, 애교 아닌가. 그런 점에서 나는 이와 같은 투자는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여기며, 이 '의지'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책생태계 관계자들이 실력 발휘를 해야 할 때라고 본다. 실력 발휘의 구체적 내용은 상상하시라. 실현될 것이니.

토론문 2

# “ 책 중심의 문화정책으로 ”

안찬수(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 1. 문화부인가 문화산업부인가

1-1. 정부는 문화정책다운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역대 정권이 펼쳐온 문화정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문화정책/ 김영삼의 문화정책/ 김대중, 노무현의 문화정책/ 이명박, 박근혜의 문화정책)

1-2.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삼았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은 바로 문화농단이었습니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태가 드러내듯이 문화정책이 배제와 억압의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은 ‘문화부의 정책’인지, ‘문화산업부의 정책’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문화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까닭입니다. 현재 문화부의 정책은 많은 경우 산업적 요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산업적 요구에 따른 문화정책 페이지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국가경쟁력, 한류, 원소스 멀티유즈(OSMU), 콘텐츠 등등입니다.

1-3. 우선 차기 정부는 인수위 운영을 통한 준비기간도 없이 집권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정농단-문화농단, 블랙리스트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는 일은 간단치 않은 과제일 것입니다. 차기 정부는 거의 붕괴 지경에 이른, 문화정책의 핵심 원칙인 불간섭주의 원칙(팔길이원칙)을 세워나가면서 해체되었거나 퇴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민간협치(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1-4. ①문화산업의 정책이 아니라, 문화정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②팔길이원칙을 회복하고 민간협치(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③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④문화관료의 정책에서 문화인의 정책으로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 2. 책, 출판, 독서, 도서관 중심의 문화정책으로

2-1. 출판산업만을 초점에 두어 살펴봐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은 출판산업 중심의 문화정책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까지 문화부의 정책에서 책, 출판, 독서, 도서관 중심의 문화정책이 펼쳐진 바가 있는가, 하고 묻게 됩니다.

2-2.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19-'21)>에서도 이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출판산업 규모를 고려, 타 산업과 유사한 예산 확충 절실 \*17년도 예산규모는 게임 641억 원, 영화 656억 원, 콘텐츠기업 육성 637억 원, 출판 367억 원”

2-3. 말하자면 문화산업의 면만을 볼 때에도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은 출판이 아니라 이른바 게임, 영화, 콘텐츠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4. 차기 정부에는 책, 출판, 독서, 도서관 중심의 문화정책을 적극 펼쳐야 합니다. 책-출판-독서-도서관 관련 법제의 정비, 문화부의 정책부서 조정도 책과 관련된 정책 부서를 모아서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창작(문화예술정책실-예술정책관-예술정책과)

독서(문화예술정책실-문화기반정책관-인문정신문화과)

도서관(문화예술정책실-문화기반정책관-도서관정책기획단)

출판(문화콘텐츠산업실-미디어정책관-출판인쇄산업과)

## 3. 독서 및 출판 관련 각종 지표 하락 추세: 원인 진단과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3-1. 백원근 소장의 발제문을 보면, 독서 및 출판 관련 각종 지표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의 연간 독서율, 성인 연평균 독서량, 하루 평균 독서 시간 감소 등등. 이는 가구당 월평균 도서관구입비의 감소, 출판시장 규모의 축소로도 드러납니다.

3-2. 이렇듯 독서 및 출판 관련 각종 지표 하락 추세의 원인은 무엇인가. 책을 읽는 시민들이 갖게 될 민주역량을 두려워하기 때문인가. 미디어 변화에 따른 문자 활자 이탈 현상 때문인가. 정부의 정책 부재 때문인가.

3-3.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①국가와 사회는 시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등 독서문화 환경을 확충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도서관에 장서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인력을 적극 배치해 나가야 합니다. ②영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책을 자유롭게 접하고 독서가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③문학 창작의 활성화, 출판문화 진흥, 도서관 인프라의 확충과 서비스 질의 개선, 독서 생활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3-4. “책을 읽지 않는 사회는 창조적 문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책을 외면하는 사회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책을 멀리하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이며, 위기의 사회입니다. 책이 죽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토론문 3

# “ 독서 출판진흥정책 제안 ”

김한청(한국출판인회의 기획정책위원장, 도서출판 다른 대표)

## 1. 도서출판진흥국 신설 및 도서출판위원회 설치

◇ 기대 효과: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출판, 도서관, 독서 등의 정책 업무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

### 1) 현황 및 문제점

- 책과 관련된 정책 조직이 분산되어 집행되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
  - 출판정책은 문화콘텐츠산업실 → 미디어정책관 → 출판인쇄산업과에서, 독서정책은 문화예술정책실 → 문화기반정책관 → 인문정신문화과에서, 도서관정책은 문화예술정책실 → 문화기반정책관 →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 분리되어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이 되고 있어서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낮음.

### 2) 정책 제안

- 출판과 도서관, 독서 정책업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칭 <도서출판국>을 신설하고, 실무적으로 총괄적 집행을 위하여 도서출판진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진흥위원회는 독임제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각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예산을 지원받지만 독립성을 보장받는 분권자율기관이어야 한다.
  -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 → 미디어문화산업실 → <도서·독서국>
  - : 도서관, 출판, 독서업무 통합 관장,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립도서센터’ 운영

## 2. 공공도서관 3천 개 설립과 연간 도서구입비 3천억 원으로 증액

◇ 기대효과: 국민 독서권 보장으로 지식복지 실현, 도서관 서비스 내실화, 출판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

###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성인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32%에 불과함.
  - ※ 스웨덴(74%), 핀란드(66%), 덴마크(63%) 등 상당수 유럽 국가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50% 이상임. \*자료 : 한국출판연구소·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 우리 국민들은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다양한 소장 자료 확보”를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인 독서 장려 방안으로 “도서관 증설 및 다양한 도서 구비”를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 ‘도서관 증설 등 지역의 독서환경 조성’(32.9%) ‘학교 독서환경 개선’(21.0%), ‘다양한 도서구비 등 좋은 책의 발행과 보급 지원’(19.0%), ‘책 읽는 직장 만들기’(15.4%)로서 도서관 증설과 다양한 도서 구비를 요구하고 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 ※ 학생의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지난 1년간(‘14년 10월~’15년 9월) 학교도서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3,000명 중 474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읽을 만한 책이 별로 없어서’(24.0%), ‘원하는 책을 찾기 어려워’(20.1%), ‘학원 때문에 학교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어서’(19.6%), ‘교실에서 너무 멀어서’(19.1%) 등으로 응답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가 978개이며, 전체 인구수로 도서관수를 나누면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 대상 인구수가 51,124명으로 18,536명인 미국보다 약 3배가 많고, 15,578명인 프랑스보다 3.3배 많고, 39,563명인 일본보다 약 1.3배 많다.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1.7권 정도로 3.13권인 일본의 반 정도이고 2.62권인 미국보다 훨씬 적다.

## 2) 정책 제안

- 현재 공공도서관 수는 약 1,000개로 향후 10년간 2,000개를 증설하여 3,000개를 만들자. 그래서 읍면동마다 도서관이 최소한 1관씩 확보되어 어디서든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지식 복지 실현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 연간 도서구입비 3,000억 원으로 증액해서 연간 신간 발행종수의 최소 1/3 정도는 구입해야 한다.
    - 공공도서관에서 연평균 8,980권의 신간을 장서로 구입하고 있다. 이는 신간 발행 종수의 15% 정도밖에 되지 못해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독서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국내 신간 발행 약 6만 종의 1/3인 약 2만종 정도를 전국 공공도서관이 1권씩 구비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천억 원의 도서구입비가 필요함.
- ※ 도서구입비 :  $20,000\text{종} \times 18,648\text{원}('14 \text{ 평균정가}) \times 0.9 \times 978\text{개관} = 3,283\text{억 원}$

토론편 4

“출판진흥 예산의 증액과 기금조성, 법제의 완비를 촉구합니다.”

박효상(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담당 상무이사, 사람in 대표)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세 분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발제자들의 발표에 덧붙여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의 증액과 기금 조성, 각종 출판 관련법과 제도의 제정과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규모와 비율, 파급 효과에 걸맞은 출판진흥 예산의 증액과 기금 조성이 절실합니다.

출판산업은 그 시대의 문화가 총체적으로 체화된 출판물을 생산하는 지식창조산업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이는 산업 진흥의 차원을 넘어 문화융성의 기반이며, 한 국가의 문화적 총체이자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또, 출판산업은 전체 콘텐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매출액)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립과 금융 지원 그리고 예산 배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콘텐츠산업 전망에 따르면, 2015년도 국내 콘텐츠산업의 전체 매출 규모는 99조 6,000억 원입니다. 그중 출판분야는 20조 3,000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20.4%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방송(16.7%), 광고(14.3%), 지식정보(12.8%), 게임(10.6%)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각종 진흥기금에 출판진흥기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1조 5,978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 4,234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5,402억 원, 영화발전기금 3,274억 원, 언론진흥기금 357억 원, 지역신문발전기금 97억 원, 그 어디에도 콘텐츠산업의 핵심인 출판진흥을 위한 기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출판진흥기금 조성 조항을 신설 하여야 하며, 최소한 5천억 원 이상의 기금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출판산업은 191억 4,300만 원인데 비해 방송은 374억 4,100만 원, 게임은 641억 7,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콘텐츠산업에서 제일 큰 매출 규모인 출판 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은 등한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체를 보더라도 ‘출판산업 육성’ 예산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출판산업 육성 예산 191억 4300만 원과 ‘세종도서’ 구입 예산 142억 400만 원을 합하더라도 총 333억 4,700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6%에 불과합니다.

특히,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모두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 총지출 5조 6971억 원과 비교하면 ‘출판산업 육성’ 예산은 고작 0.34%, ‘세종도서’ 예산을 포함하더라도 0.59%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6년도에 발표한 ‘OECD 주요 국가의 문화재정 비교’를 보면, 2014년 OECD 34개국의 일반정부 총지출 대비 문화지출 비율은 평균 2.64%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15%로 30개국 중 19위로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문화재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용 면에서는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 체육, 문화와 관광일반 부문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정 중 출판산업 예산만 따로 보더라도 영국 0.93%, 프랑스 0.73%, 중국 0.53%로 우리나라의 0.33%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발제자이신 이민호 교수의 말씀대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리더십의 중요한 덕망이며, 출판문화 정책의 밑바탕인 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권리를 인정해야 출판이 발전합니다. 판면권, 공공대출권, 사적복제보상금제도와 같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저작자가 창작한 하나의 저작물이 독자의 손에 이르려면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저작자의 창작 행위를 제외한 그 나머지 과정은 대부분 출판사가 인력과 시간, 비용을 투입하여 직접 수행합니다. 이렇듯 출판사는 도서의 출판과정에서 편집, 교정, 레이아웃, 디자인 등의 창의적 노력과 물리적 투자를 더해 저작물의 완성도와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물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만 출판사의 창의성과 노력이 담긴 인쇄배열이나 디자인적인 요소, 즉 판면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판지식문화산업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저자와 독자를 매개하는 출판사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판면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도서관에서는 책을 무료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책과 도서관은 공공재의 성격이 있으므로 언뜻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책을 무료로 대출해 줄 때마다 저작자나 출판사는 판매 기회를 잃어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책의 공공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를 왜 저작자와 출판사만 부담해야 할까요?

우리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면, 사용료의 일정 부분을 작사·작곡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도 무료로 책을 대여하되 그에 대한 기회 손실을 저자와 출판사에 보상할 수 있는 ‘공공대출권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에 따르면 OECD 34개국 가운데 독일, 영국,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26개국에서 이미 이 같은 내용의 ‘공공대출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사적복제행위를 감시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저작권·출판권자가 사적복제행위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과 사적복제에 의하여 저작권·출판권자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권리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적복제는 존재하고 기술 발전으로 사적복제가 증가하게 된 현 상황에서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와 저작권·출판권자의 이익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해결책이 바로 사적복제보상금제도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정가제는 독자가 책값을 신뢰할 수 있게 하고, 지역의 문화 인프라로 작용해야 하는 서점이 가격 경쟁으로 문을 닫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는 저자의 창작 환경 조성, 출판의 다양성 보장, 중소출판사 및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독자에게 양질의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그 취지에 부합하는 변화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책을 할인이 아닌 가치로 경쟁해서 양질의 책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여 소비자(독자)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출판사들의 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년간 신간 도서 가격은 5.2% 하락하고 구간 도서 1만여 종의 재정가는 평균 41.4% 인하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편익이 증대했을 뿐만 아니라 할인이 아닌 가치 중심으로 구매 패턴이 바뀌고 있으며, 큐레이션을 내세운 전문서점의 등장과 같은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0% 할인에 5% 적립이라는 ‘할인을 제한제’에 머물러 있는 도서정가제를 완전한 도서정가제로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영구 법제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독서 증진과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 증액과 기금 조성, 법제의 완비를 촉구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편 5

# “ 책의 사회적 가치를 살리자 ”

정성훈(서울서점조합 대외협력위원장)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정보화시대에 생산, 유통, 소비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온라인 중심의 유통혁신을 기반으로 생산시스템의 진화, 소비행태의 변화를 이끌었고, 출판-도서유통생태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20여 년간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서점업계는 70%의 동네서점이 사라지면서 변화해왔다. 특히, IMF 시대 이후에 닷컴열풍의 와중에 온라인서점이 급성장하고 미국식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자율경쟁이라는 미명하에 책은 ‘제값을 주고 사면 바보’인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런 반성들이 반영된 것이 2014년 11월에 시행된 개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일명 도서정가제법)이며, 도서생태계는 바른 유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와 있는 셈이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며 산업의 대전환기에 중세 대학이 설립되는 시점부터 많은 업종과 직업들이 명멸할 때에도 800년 이상 책과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서점업계도 산업조정과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운영모델을 심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오늘은 우선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1. 서점입법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도서를 포함한 문화산업에 관련된 법률들입니다.

-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창작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그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저작권법’
- \*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 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일명 도서정가제법)
- \*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균등한 독서활동기회를 보장하려는 ‘독서문화진흥법’.
- \*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도서관법’.

\* 여론의 다양성을 위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 가운데 서점에 관한 ‘법률’은 없습니다. 서점업을 위시한 도서유통에 관한 사항은 출판문화 산업진흥법 제22조가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서점업계는 입법의 숙원과제를 풀기 위한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2016년 7월에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이 자치입법이 서점 관련 최초의 법규입니다. 이후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위의 언급한 법률들처럼 출판도서문화생태계에서 서점에 관한 독립법률은 없습니다.

향후 바른 유통을 위해서는 서점고유법률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서점인증제와 표준공급률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서점인증제는 바른 유통의 핵심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주유소, 쌀가게, 학원 등이 버젓이 서점 사업자를 내었다 하여 서점을 칭하는 현 사항은 분명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규율 자체가 불가능한 현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서점고유법률을 통하여 이런 부분을 담아야 합니다.

또한 표준공급률은 독자들과 항상 접촉하는 동네서점 뿐만 아니라 출판계의 다수를 차지하는 1인(혹은 소형) 출판사에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유통파위에 기반한 인터넷서점과 대형서점의 집요하고 치열한 원가절감노력에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낮아진 출판사의 이익은 풍선효과를 통해서 게임의 다른 참여자인 동네서점들에 일부 전가되어 동네서점의 수익구조악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완전도서정가제까지 더하면 출판사, 서점, 독자들 모두 가격의 안정화와 예측가능성을 이루게 될 것이며, 결국 궁극적인 목표인 독서인구확대를 통한 지식문화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표준공급률을 법제화하기 이전이라도 자율적인 기본안을 마련하고 당장에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 2. 책은 사용가치를 넘어 사회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언급한 기업형 중고책 매매행위에 대한 문제는 심각합니다. 2차 시장은 1차 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범위내에서 의미를 가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오히려 원천시장을 잠식하고 황폐화시키는 방향으로 유통구조가 만들어지는 점은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책의 ‘사용가치’에만 집중하다보니 오히려 책의 지식공공재라는 ‘사회적가치’를 깎아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중고책의 ‘재활용’이 사회효용을 높이는 측면이 분명 있을지라도 책이 담아

왔고, 담아갈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가치 등의 ‘사회적가치’는 당장의 사용가치의 효용성 이상 일 것이고 값으로도 매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확대정책에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식 등의 창조적 기제들을 널리 알리고 함께 나누는 것 이전에 창조력을 발휘할 토양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저자와 출판사가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고, 1차 시장의 유통망이 황폐화된 마당에는 2차 시장을 이용하는 독자들의 ‘책의 사용가치’는 빈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 3. 출판계와 서점업계의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클라우드 슈باط은 [제4차 산업혁명](새로운현재 간행) 서문에서

“제4차 산업혁명은 규모와 속도, 범위를 고려하면 가히 역사적인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기술의 발전과 수용을 둘러싼 엄청난 불확실성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의 복잡성과 여러 분야에 걸친 상호연계성 면에서는 정-재계 및 학계, 시민사회를 포함한 지구촌의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이 이 새로운 기류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한다“. 덧붙여 오늘 발제들에서 언급된 내용들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간, 수요자인 독자의 정체성 유지, 기계와 인간의 통섭, 4차 산업의 태동기에 마련된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담긴 정책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산업생태계 변화의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출판문화도서유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 토론문 6

## “ 독자를 위한 출판진흥정책 ”

박세중(언론노조 출판노협 의장)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자유로이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마땅히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출판진흥정책은 출판이 갖는 중요한 가치, 공공성과 다양성에 바탕을 두고 고민돼야 한다. 공공성과 다양성은 독자를 위해 출판물을 통해 실현돼야 할 것이다.

출판 지원 정책은 산업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독자들의 책 접근권과 이용권 확대 강화의 관점에서 수립돼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출판업계를 살리는 정책이기에, 여기에는 엄격한 공공성의 잣대가 필요하다.

지난 2월에 발표된 ‘출판진흥 5개년 계획’이 진정 독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든다. 송인서적 부도 이후 출판계 전반의 뜨거운 요구를 담은 ‘출판유통 선진화’ 계획이 포함돼 있다는 점 다행이지만 통합된 출판유통시스템을 여러 출판 주체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게 될지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다. 출판유통 주체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실행 의지가 필요하다. 아울러 출판유통 선진화뿐 아니라 출판유통 공공화를 강화해야 한다. 공영 출판유통원을 설립하여, 공적 지원과 규제를 통해 낡은 유통 관행을 혁신해 상생의 출판유통 생태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4년에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책 단통법’이라 불리며 독자들의 불만을 산 것은, 어중간하게 합의된 내용도 문제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 홍보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유통을 시장경쟁의 원리에만 맡길 경우,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저작물의 생산과 보급이 원활해지지 못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오는 11월 보완돼야 할 도서정가제에 관해 민간 참여의 문을 열어놓았지만, 정부의 실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5개년 계획’에 “아마존과 같은 유통업체의 성장은 독점적 지위 남용의 문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인과 특정 출판사를 지원에서 배제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개편해야 한다는 데 적극 찬성한다.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진흥원 쇄신과정에서, 인적 구성에 출판사와 서점뿐 아니라 독자와 출판노동자도 포함돼야 한다.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보편적인 독서 인프라 확대 및 출판생태계 상생을 위한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5개년 계획’에 출판 다양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리포터』 『오페라의 유령』 『미생』 등 거대 부가가치를 창출한 책이나 한류에 편승한 저작권 수출보다 중요한 것은 ‘강소 출판’을 육성하는 것이다.

여러 인터넷 서점이 확대하고 있는 중고서점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는 편법으로 도서정가제를 피해가며 신간 판매의 흐름을 막고 있다. 중고책 매입/매출로 인한 이윤을 제한하여 건전한 출판 시장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출판사에 소속된 재직노동자는 물론 외주노동자 모두를 아우르는 ‘출판산업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여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출판은 산업 규모에 비해 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많고, 산업의 특성상 종사자 수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외주의 비중이 35.8%로 매우 높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6) 출판노동자의 안정된 노동에 마련될 때, 출판사는 양질의 인력을 쓸 수 있으며 독자들은 좋은 책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출판진흥의 핵심은 사람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출판생태계 모든 주체가 모여 출판의 공공성과 다양성의 개념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출판정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그 방향성은 독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차기정부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

부록

문학·출판·서점·도서관·독서·교육 관련 단체의 제19대 대통령 후보 공약 제안  
〈책 읽는 대통령, 책이 문화정책의 기본인 나라〉를 위한 성명서



문학·출판·서점·도서관·독서·교육 관련 단체의 제19대 대통령 후보 공약 제안  
 〈책 읽는 대통령, 책이 문화정책의 기본인 나라〉를 위한 성명서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 기조로 삼았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문화계를 황폐화시켰다. 단선적인 문화산업으로만 치달은 나머지 문화융성은 커녕 문화농단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억압당하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는 침해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문화 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독립성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문화 예산의 많은 부분이 이념적 잣대에 따라 집행되었으며, 최순실 개인의 먹잇감이 되었다.

이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선 이들은 하루 빨리 국민에게 문화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참된 문화 발전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문화계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조기 대선을 핑계 삼을 일이 결코 아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들은 새 정치에 대한 청사진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지금 세계는 인간 중심, 문화 중심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 이런 사회가 되려면 창의력과 상상력이 넘쳐나야 한다. 문학, 출판, 독서, 도서관 문화 등 지식문화계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꿈과 노력들이 집약되어 책으로 결실된다고 믿는다. 책이야말로 국민 창의력과 상상력의 근본 원천이다.

책을 읽지 않는 사회는 창조적 문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책을 외면하는 사회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없다. 책을 멀리하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이며, 위기의 사회이다. 책이 죽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문학 창작의 활성화, 출판문화 진흥, 도서관 인프라의 확충과 서비스 질의 개선, 독서 생활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책을 읽는 시민의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엄중한 책임이다.

이에 우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주요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차기 정부의 문화정책으로 다음 10가지를 요구한다.

### 1. 창작, 출판, 독서, 도서관의 자유 보장

대통령 후보는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21조 1항)와 검열 금지(헌법 21조 2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22조 1항)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언론·출판, 학문과 예술이야말로 사상·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 2. 검열 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 보장

문화농단의 진상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검열을 근본적으로 막을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각종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3. 국민의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프로그램 확대

영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책을 자유롭게 접하고 독서가 생활화할 수 있도록 영유아 북스타트(Book Start), 읽기-쓰기 중심의 학교교육 강화, 독서동아리 활동, 학교와 직장의 책 읽는 시간, 찾아가는 문예·인문학 강좌,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큰 할자 도서의 출판 및 보급 지원, 책 읽는 도시 지원 정책 등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나아가 독서 증진 활동이 전국의 도서관과 서점 등에서 꾸준히 펼쳐질 수 있도록 독서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 4. 문화부 <독서출판정책국> 신설 및 <독서출판진흥위원회> 설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창작(문화예술정책실-예술정책관-예술정책과), 출판(문화콘텐츠산업실-미디어정책관-출판인쇄산업과), 독서와 도서관(문화예술정책실-문화기반정책관-인문정신문화과/도서관정책기획단) 등 책과 관련된 부서가 흩어져 있다. 책 문화 생태계가 위기인 지금, 책과 관련된 정책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책 시행의 상승효과를 도모하도록 가칭 <독서출판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 프랑스 문화부의 도서·독서국이 좋은 선행이다.

또한 그 실행기구로 출판 진흥에 국한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출판, 독서, 도서관 진흥 업무를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가칭 <독서출판진흥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민간 주도의 독립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 책 생태계를 살리는 선봉에 서도록 해야 한다.

## 5.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

우리나라 한 가정의 도서구입비는 학습참고서를 제외하면 월평균 6천 원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 3인 가구라면 한 사람당 2천원 꼴이다. 과세표준 8천8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연간 도서구입 총액의 15%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도서 구입과 독서활동을 권장해야 한다.

## 6. 문학창작기금 및 출판진흥기금 조성

문학진흥법을 개정, 보완하여 문학 진흥의 실질적인 상설기구인 한국문학진흥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창작자 육성과 한국문학 활성화를 위한 문학진흥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출판진흥기금 조성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각각 5천억 원 이상이 모아져야 한다.

## 7. 공공도서관을 3천개로 확충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1천개 시대를 맞았다. 그러나 OECD 주요 선진국에 비해 봉사 대상 인구는 2배, 특히 독일의 5배나 될 정도로 여전히 도서관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10년간 2천개의 공공도서관을 증설하여 모두 3천개 수준의 대형 공공도서관 선진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도서관 접근성이 높아져야 국민이 어디서나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지식·정보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 또한, 지역 내 여러 도서관의 역할과 협력을 증진시켜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전국의 작은도서관이 내실화·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8.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와 전문인력 확충

공공도서관의 국민 1인당 장서량은 1.75권 정도로 3권 내외인 미국이나 일본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도서관 전문인력 역시 국제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국내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미술관 등) 중에서도 도서관 직원 수가 가장 적다. 전국의 1만 개가 넘는 학교도서관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천개가 되지 않는다.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도 선진국 대비 1/3 수준에 불과하다.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만들어야 한다. 도서구입비를 연간 3천억 원 수준으로 확보하고, 도서관마다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 9. 도서정가제 강화와 서점 활성화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거품을 없애 독자가 책값을 신뢰하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이다. 서점이 가격 경쟁으로 문을 닫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저작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책 문화 생태계 보호의 시발점이다. 도서정가제의 이점은 뚜렷하다. 도서정가제 강화(2014.11.21) 이후 지난 2년간 신간도서 평균 정가가 5.2% 하락하고(19,101원→18,108원), 구간도서 1만여 종의 재정가는 평균 41.4% 인하되어(30,099원→17,646원) 독자의 경제적 편익도 증대되었다. 가격이 아닌 콘텐츠 중심의 도서 구매 패턴 변화, 큐레이션 전문서점의 창업 증가 등 서점계의 의미 있는 변화가 촉발되었다. 그러나 현행 정가제는 법정 할인율(15%)과 각종 편법들을 인정하여 문제가 많다. 도서정가제를 강화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나아가 매력적인 지역 서점이 많아져야 독자가 새 책과 접할 기회가 커지고 출판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므로, 정부는 종합적인 서점 육성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 10. 공공대출권과 판면권 도입

영국을 비롯한 문화 선진국들에서 시행하는 ‘공공대출권’은 도서관 대출 도서에 대해 국가가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제도로 1946년 덴마크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유럽 28개국에서 정착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도서관 활성화를 기하면서 동시에 저자들도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공대출권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책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출판인의 노력을 보호하는 것이 ‘판면권’이다. 출판사가 무단 복제에 대항하고 수업목적 보상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판면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이 <책 읽는 대통령, 책이 문화정책의 기본인 나라>를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하며, 이를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책 읽는 국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7년 3월 29일

한국작가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학습자료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문화연대,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전국학교도서관모임,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행복한아침독서,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총 20개 단체)









